

비명계, '이재명 혐지 출마' 압박에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

비명계 "이재명 먼저 혐지 출마 선언해야" 친명계 "배제할 순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당내 혐지 출마 요구도... "이재명부터 결단"

비명(이재명)계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혐지 출마를 요구하고 나서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계파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대중적인 차원에서 혐지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비명계의 요구는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혐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거확단이 비명계로 꾸려진데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에게 공정한 공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방송인 '전영선의 아침저녁'에서 이 대표를 향해 "먼저 혐지 출마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당 대표 전당대회까지 출마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어 사당화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혐지출마를 결정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가장 좋은 곳에서 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면 비명계 3선 의원들 어디 다른 데로 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총재 시절 비례대표를 받더라도 이길까 말까한 15번을 받아 지지율을 조금만 덜 받아도 떨어질 만한 곳을 받았는데 이 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사람이면 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친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 공정성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서 친명계가 혐지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 의원들도 혐지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며 "친명계의 혐지 출마 없이 비명계만 숨어 낸다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혐지 출마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의 이 대표 흔들기란 판단에서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혐지출마는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혐지출마라는 결과는 못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개 혐지출마라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라며 "그것보다도 옹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직한 말이지,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종로·분당 등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당대표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하셨으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혐지 출마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인천시와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계양구 현안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



총선에도 계양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당에 비해 인적 쇄신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오한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영남 중진 등에게 불출마 또는 혐지 출마를 권고하는 등 인적 쇄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총선을 앞두고 벌어질 혁신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우리고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헛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계양에 출마하는데 중진 의원들이 혐지 출마를 고려하겠느냐"며 "결국 이 대표부터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김희면기자



윤, APEC 계기로 IPEF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1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같은 기간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IPEF 14개 참여국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IPEF 참여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제7차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해당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1(무역), 필라3(정경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나기자

민주 "노란봉투법 정상 공포"...국힘 "거부권 불가피"

민주 "거부권 행사, '땡운 뉴스' 독재 선언" 국힘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산업 악법"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밝혔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썬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운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아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